

실물경제에 330조 푼다... ‘기업 성장·민생’ 동시 사수



- ① 장민영 은행장.
- ② 지난 10일 서울 코엑스 스타트업 브랜치에서 열린 IBK창공 ‘실리콘밸리 4기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 킷오프 데이 행사를 마치고 (좌측 1열 다섯 번째부터)이건홍 IBK기업은행 혁신금융그룹장, 안성우 500글로벌 총괄파트너와 참여기업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 ③ 지난 3일 수원특례시청에서 열린 ‘수원시 금고업무 취급 약정’ 체결식에서 장민영 IBK기업은행장(오른쪽)과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 ④ IBK기업은행은 신용보증기금과 지난 7월 9일 서울 중구 을지로 기업은행 본점에서 ‘포용 및 생산적 금융지원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 ⑤ 서울 을지로 IBK기업은행 전경.

/IBK기업은행



정부가 금융권에 ‘생산적 금융’과 ‘포용적 금융’을 주문하면서 IBK기업은행도 자금의 물꼬를 기업과 혁신산업, 금융 취약계층으로 돌리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부동산과 가계대출에 쏟았던 금융자금을 실물경제로 이동시키는 동시에 중·저신용자와 소상공인의 금융 접근성을 높여 성장과 양극화 해소라는 두 가지 과제를 함께 풀겠다는 구상이다.

기업은행은 오는 2030년까지 총 300조원 규모의 ‘IBK형 생산적 금융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또 금융 소외계층과 취약차주의 재기·회복을 위해 30조원 이상의 포용금융을 공급할 계획이다. 기업금융과 혁신산업에 대한 자금 공급을 확대하면서도 중·저신용자와 소상공인 등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병행하겠다는 포석이다.

⑥ IBK기업은행



◆ 생산·포용금융 전담조직 신설

기업은행은 정부의 생산적·포용적 금융 기조에 맞춰 내부 조직과 업무 체계를 재정비하고 있다.

지난 7월에는 ‘생산적·포용금융부’를 만들어 관련 업무를 전담하도록 했다. 첨단·혁신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부터 금융 취약계층 지원, 개인채무조정을 통한 고객 재기 지원까지 생산적·포용적 금융 관련 기능을 한 조직에서 총괄하도록 한 것이다.

투자 부문에서도 정책사업 전담 기능을 강화했다. 대출 중심의 자금 공급에서 벗어나 투자와 보증, 정책금융기관과의 공동사업 등을 연계해 기업 성장 단계별로 필요한 자금을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책금융기관 간 협업도 확대하고 있다. 기업은행은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을 비롯해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과 공동 사업을 추진하며 정책금융 공급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기업은행이 이처럼 조직과 협업체계를 동시에 정비하는 것은 생산적·포용적 금융을 일회성 금융지원이 아닌 중장기 경영전략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 정책에 맞춰 금융공급대상을 확대하는 동시에 자금 배분과 심사, 리스크 관리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 생산금융 300조·포용금융 30조

조직 정비와 함께 실제 자금 공급도 확대하고 있다.

생산적 금융 부문에서는 2030년까지 총 300조원을 공급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첨단산업과 혁신기업, 중소·중견·벤처기업 등에 성장자금을 공급하고 기업의 해외 진출과 스케일업을 지원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과는 총 1조 5000억원 규모의 생산적·포용적 금융 지원에 나섰다. 소기업과 전통 제조업체, 소재·부품·장비 기업 등에 대해서는 대출금리를 최대 1.3%포인트(p) 낮추고 보증료를 지원해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한다.

정책금융기관 간 공동투자도 본격화하고 있다. 기업은행은 한국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과 각각 1500억원씩 총 4500억원을 공동 출자해 7000억원 규모의 ‘정책금융기관 글로벌 스케일업 협력펀드’를 조성한다.

펀드는 대형펀드 1개와 중형펀드 2개 등 총 3개로 구성되며 중소·중견·벤처기업에 성장자금을 공급하고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데 활용된다. 단순한 대출 공급을 넘어 정책금융기관이 공동으로 모험자본을 공급해 유망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다.

포용금융은 금융 접근성이 낮은 계층의 재기와 회복을 지원하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기업은행은 2030년까지 금융 소외계층과 취약차주를 대상으로 30조원 이상을 지원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중·저신용자와 소상공인 등 기존 금융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자금조달이 어려웠던 계층에 대한 금융 공급을 확대하고, 채무조정과 재기지원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한다.

‘착한금리 포용대출’이 대표적이다. 개인 신용평점 하위 50%인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연 4.90%의 단일금리를 적용하고 만 34세 이하 청년에게는 연 4.70%의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대출기간도 최장 10년까지 설정해 취약차주의 월 상환 부담을 낮췄다.

구조조정이 필요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상생 재기지원 프로그램’ 지원 대상도 연간 500개 이상 기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단순히 신규 자금을 공급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기존 채무 부담을 줄이고 정상적인 금융거래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이다.

기업은행이 생산적·포용적 금융에 적극적으로 나서려는 것은 정책금융기관이라는 특수성 과도 맞닿아 있다. 일반 시중은행보다 중소기업

금융 비중이 높은 만큼 정부가 추진하는 자금배분 구조 전환을 현장에서 구현하는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생산적·포용적 금융 확대 과정에서 건전성과 수익성을 함께 확보하는 것은 과제로 꼽힌다. 혁신기업과 중·저신용자에 대한 자금 공급이 늘어날수록 신용위험 관리의 중요성도 커질 수밖에 없다.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자금 공급 확대와 함께 정교한 신용평가와 사후관리 체계를 갖춰야 지속 가능한 금융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생산적·포용적 금융의 핵심은 단순히 대출 규모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기존 부동산·가계 중심의 자금 배분 구조를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과 금융 접근성이 낮은 계층으로 바꾸는 것”이라며 “정책금융기관은 직접 자금을 공급하는 동시에 민간 금융회사의 참여를 유도하는 마중물 역할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metro